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통권 30호), 2024: 277~288 https://doi.org/10.24987/SNUACAR.2024.4.14.1.277

지금 아시아를 사유한다는 것에 대하여

신범식·유성희 엮음, 『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역사, 시각, 방법』(진인진, 2022)을 읽고

박해남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I.

메가아시아를 말하기 전에 우선 동아시아를 말해보자. 동아시아론은 한편으로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동아시아를 서구적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한편으로 탈근대적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동아시아를 서구 중심의 근대에 대한 대안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동아시아론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사이 동아시아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였다.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이 이러한 동아시아론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라면 이는 중요한 참조점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은 한국발 지역주의가 갖는 사상적 과제를 도출하는 한 통로가 되며, 메가아시아를 분석적으로 독해하는 토대 또한 되리라 판단된다.

동아시아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서 진행된 탈냉전, 유럽 지역 통합체의 등장, 그리고 근대화론의 쇠퇴와 포스트식민주의 담론의 등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담론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서구의 시선 또는 서구의 시선을 장착한 일본의 시선에 기초한 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연구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탈식민적이고 탈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와 중국을 재구성하려 하였던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와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조

공과 책봉으로 식민과 냉전 이전 동아시아 세계를 재발견한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시아연대론(アジア連帯論),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 동아연맹론(東亜連盟論), 동아협동체론(東亜協同体論) 같은 침략적 지역주의의 그림자와 지역에 드리운 냉전의 그림자를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의 동아시아론은 일본 바깥의 연구자들이 주도함으로써 앞선 시기의 그림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연구자들의 작업이 활발하였는데, 이 중 잘 알려진 일군의 논자들은 탈식민주의적 동기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자원을 새로이 인식하고자 한 이들이었다. 한자, 유교, 책봉 등으로 동아시아 문명을 해명하려 하였던 조동일, 신화와 도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통의 기층 문화 자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정재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치이자 문화로 유교를 정의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동인으로 지목하였던 유석춘과 함재봉 등이 대표적이다.

그 한켠에는 20세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극복이라는 동기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에 주목했던 『창작과 비평』의 지식인들이 있었다. 제국주의와 냉전의 결절점이었던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민중연대를 주장한 최원식, 분단체제의 극복과 자본주의 문명 극복을 위한 다국적 공동체를 이야기한 백낙청, 국민국가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복합국가의 실험을 이야기한 백영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천광싱(陳光興),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쑨거(孫歌), 강상중(姜尙中),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등 다양한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실천하며 영향력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하였다.

이 두 흐름은 공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꽤나 큰 지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HK/HK+)만 하더라도 10개가 넘는 사업단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탐구하거나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점연구소와 인문사회연구소를 더한다면 그 수는 수십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을 지나며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동

아시아 담론이 지니는 내적 난점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작과 비평의 동아시아론은 1990년대 탈냉전을 배경으로 등장한 담론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과 시민사회의 성장,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북한의 개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동아시아론의 기저에 있었던 것이다. 지역 내 시민사회와 지식인이 주도하는 대안적 지역통합론이 갖는 설득력도 그러한 전망에 기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환경이 변했다. 북한의 개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한국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답보 상태가 되었고, 일본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중국 시민사회는 생각처럼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들어 형성된 지역의 신냉전은 지역 통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식인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켰다.

이론의 내적 난점 역시 존재한다. 탈식민과 탈자본주의 질서 구축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상당함에도 목표를 현실화할 프로세스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아시아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이상화되었다는 점, 서구와 일본 주도의 20세기 세계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다 보니 전근대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중심-주변 구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했다는 점, 한반도의 분단과 지역의 냉전체제 극복을 위하여 동아시아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젠더, 계급 등 동아시아 지역 대중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담론이 되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지식인들을 넘어 담론의 영향력이 대중으로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지식인 위주의 담론으로 귀결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의 담론의 공백에 등장한 것은 경제공동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환동해', '환황해' 등의 개념과 더불어 주변국가과의 교류 및 무역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주의를 제출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며, 일본의 지방 정부들에서도 '환일본해' 같은 개념을 통해 교류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었다. 지역 국가나 지역공동체를 만들 길이 점차 요원해지는 가운데 낮은 수준의 지역 사회 형성, 즉,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형

성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의의 범위가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21세기 들어 경제, 에너지, 안보, 이주 등 많은 분야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할 단위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나, 2차 대전 이후 차례로 독립하면서 다른 아시아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지구화된 경제에서 자원과 상품의 공급자 역할을 맡으면서 아시아 내 상품의 교류가 늘어났고, 이주를 통한 인간의 이동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구상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 정책,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 교통과 에너지 협력, 안보 협력을 모색하여 왔던 것이다. 이 같은 일관된 흐름은 우리에게 이제 아시아 지역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교류와 협력의 수준, 지정학적 중요성 등 여러 차원에서 이제는 지역주의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좁혀서는 현상을 타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로 그 범위를 확장한 지역주의는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21세기의 현실에 정합적인 지역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몇 개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협력과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라는 현실을 고려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우회하면서도 포괄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주의의 개발이 그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또한, 아시아라는 지역이 동아시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갈등을 내재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역다움(regionhood)에서 출발하여 지역 협력과 지역 사회 형성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개별 수준에서의 연구를 수행해 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탈식민주의적인 관심이 '아시아적인 것'을 섣부르게 이상화하거나 전근대 아시아의 중심-주변 구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의 대중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

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메가아시아 연구 입문: 역사, 시각, 방법』을 보자. 이 책을 동아시아론의 '이후'에 등장한 글로 위치짓는 가운데, 이 글은 이 책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과 얼마나 조응하며, 과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 글의 1장에서는 지역 연구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또 지역연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의한다. 지역연구가 갖는 연구 대상의 타자화라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출발한 이 장은 여행기에서 출발하여 박물학을 거쳐 민족지학(ethnography)에 이르는, 서구인의 눈으로 비서구를 분류하고 관찰하는 학문과 지식(學知)의 발전을 다룬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제국주의 시기 비유럽을 연구하는 학문이자 세계지배와 경영 수단이었던 지역학의 발전을 말한다. 냉전기에 이르러 지역학은 대학과 연구소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되었으며, 그리고 1990년대 탈냉전기에 이르러서는 안보에서 경제로의 주제 확장,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탈국민국가적 경향 등이 지역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보인다고 말한다. 그런 지역연구가 세계화의 시대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개체기술과 법칙정립 사이의 절충적 비교연구 수단으로, 한국의 지역 전략의 출발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저자는 장을 마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장은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특정 속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상정되는 지역은 지역격화(regionification), 지역다움(regionhood), 지역성(regionness), 지역색(regionality)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이때 지역은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적 사회공간에서 출발하여 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국가(regionstate)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고도화된 지역성이 형성된 유럽에 비해 동북아시

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내부 상호작용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유럽과는 다른 지역성 형성의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비교지역연구를 통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부에서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가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다룬다. 그 첫 번째인 3장은 '아시아'와 '오리엔트(동양)'라는 개념을 만든 유럽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탐색한다. 아시아가 세계를 3개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 로 나누는 가운데 그 일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면, 오리엔트는 문화적인 타자성을 함축한 개념이었다. 이 가운데 동북아에서는 오리엔트보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서구 역시 오리엔트보다 아시아를 사용하게 되었다.

4장은 프랑스의 극동 연구기관인 국립극동연구원(EFEO: Ecole française d' Extrême-Orient)을 소개하고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인도양 진출부터 19세기 인도차이나 식민지 건설에 이르는 동안 이미 프랑스에는 동양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인도차이나가 식민지화되고 지역 연구 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19세기 말 국립극동연구원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인도, 라오스, 일본 등을 연구하는 이들로,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인근 지역까지 폭넓게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베트남인 연구자들 역시 이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일방향적이지는 않은 지식 생산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5장과 6장은 20세기 세계체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를 다룬다.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 탈식민과 냉전의 시대인 동시에 '미국의 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를 바라보았고, 또 다르게 바라본다는 자의식을 지니게 된다. <조용한 미국인(1955)>과 <못생긴 미국인(1958)>은 이를 잘 반영하는 작품으로, 유럽의 제국들과 달리 아시아를 정복하고 문명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는 미국이라는 자의식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연구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제국주의의 해체와 탈식

민, 그리고 냉전은 연구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변수였다. 2차 대전 이후 지역학의 성장 및 근대화론의 확산은 냉전 및 헤게모니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68혁명 이후 근대화론에 대한 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역설적으로 근대화론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은 발생하지 않았다. 분명 이전보다는 훨씬 관점이 다양화되었지만 여전히 신냉전과 같은 지정학적 관심사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 아시아 연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7장은 이를 다루고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서아시아'는 스포츠 영역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이 중동이나 서아시아 등 다른 지역적 정체성을 압도하고 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매우 친숙한데, 이는 서구 지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동남아 각국에서 민족주의가 발전하고 독립 이후 반둥회의(1955)를 거쳐 아세안의 창설(1967)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개념을 활용한 지역주의적 담론의 생산과 이를 현실화하려는 실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역시 중화질서에서 근대 국가 간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오용하여 침략의 논리로 활용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아시아의 각 지역이 지역격(regionhood) 내지 지역성(regionness)을 어디까지 만들어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8장은 동북아시아를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동양', '동아', '동방'에서 시작하여 '대동아'를 거쳐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다.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는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지역주의를 드러내주는 개념이었는데, 전자가 주로 한반도와 한반도 문제를 중심에 둔 개념이라면 동아시아는 권역의 구획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9장은 동남아시아를 다룬다.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은 미국이 2차 대전 중 쓰기 시작한, 지정학적 전략에 기반한 개념이었다. 이는 1954년 동남아시아판 NATO라 볼 수 있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에도 다시 사용되었으며, 1967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 모여 만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출범과 함께 지역을 명명하는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

다. 그러나 '아세안'이라는 우산 아래에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어서, 1985년 브루나이, 1990년대 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합류하고 나서야 ASEAN은 지역 대부분을 포괄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지역주의 실천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10장은 동남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지역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두드러지는 남아시아를 다룬다. 남아시아 역시 서구 국가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와 달리 이 지역은 독립과 더불어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지속적인 분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등 지역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역내 분쟁 외에 인도 중국 간 갈등이 더해지며 이 지역의 지역격 내지 지역성 형성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11장은 중앙아시아에 관한 장이다. 중앙아시아라는 지명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것이 아니었다. 독일의 지리학자 훔볼트가 이를 쓰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내륙아시아'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명들과 혼용되다가 1990년대 이 지역 국가들이 소련 해체와 더불어 독립하면서 정착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가진 지역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이 지역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튀르크 문화, 실크로드라는 역사 등을 공유하고 있고, 201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할 수 있다.

12장에서 다룰 서아시아는 중앙아시아와 다른 그림을 보여 준다. 어디까지를 서아시아로 부를지 기준부터 모호하다. 카프카스 3국은 지리적으로 서아시아에 해당하지만 종교와 문화적 이유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를 중심으로 보자면 북아프리카까지 권역이 확장될 수도 있다. 이 지역의 지역성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슬람이라는 종교라 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 지역의 통합을 요원케 하고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 역시 지역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GCC, 아랍연맹, 이슬람 협력기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 플랫폼이 있지만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이 지역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13장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의 지역들”은 인구와 사회, 자연환경, 경제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아시아 각 지역의 지표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지표는 아시아가 인종과 종교, 자연환경 같은 조건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어져 있는 과제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마지막 14장에서는 다시금 아시아라는 개념의 연원과 용법을 추적하는 가운데 메가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지역성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아시아라는 개념은 (제국주의)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체를 만들면서 확산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담론은 반둥회의로 대표되는 냉전 시기의 저항적 아시아주의와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같은 개념과 더불어 탈냉전기에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장의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아시아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유기성이 향상되는 ‘아시아의 아시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아시아 각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개념인 동시에 아시아의 공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천적 전략과 정책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개념, 분석적이면서 실천적인 개념이 메가아시아라는 것이다.

III.

이 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아시아’는 ‘오리엔트’와 더불어 지리적·문화적·인종적인 타자를 지칭하기 위해 활용된 개념이다. 이 타자화라는 동기는 아시아 지역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식민주의와 연동되어 있는 프랑스의 아시아 지역 연구, 탈식민 이후 냉전기 세계 헤게모니 전략과 관련이 있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서구의 아시아 지역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넘어 아시아의 시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다.

그런 아시아의 각 지역들이 갖는 지역협력, 지역격, 지역성 등은 얼마나 발전

되어 온 것일까? 이들 지역 모두가 지역협력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서로 많이 다르다. 남아시아와 서아시아는 다양한 갈등으로 지역협력의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는 다양한 지역주의 담론이 생산되고 협력의 플랫폼이 있지만 갈등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그나마 지역협력의 플랫폼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성 형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현재 아시아 역내 경제, 사회, 문화적 유기성이 향상되면서 '메가아시아'라 불릴 만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개념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아시아의 형성을 위한 전략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새로운 아시아 담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이 책이 말하는 메가아시아는 이 글의 서두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과제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히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주의 발명, 지역주의 형성의 구체적 프로세스 제시, 그리고 아시아 대중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과 연계된 지역주의 담론 등의 과제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이 책이 말하는 메가아시아 개념은 시의성이 있다. 이 책이 반복해서 말하듯이 많은 아시아 지역들이 식민지가 되어 제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근대로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변화는 아시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몰라보게 확대시켰다. 그런 가운데 아시아의 지정학 위치가 중요해진 오늘날은 한반도 문제마저도 동아시아라는 프레임이 아닌 아시아를 경유해야 매듭을 풀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메가아시아 개념을 통해 아시아가 점차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어져 가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 또 개념을 통해 공생을 틀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중심적 아시아 담론을 넘어 탈식민주의적인 아시아 담론의 창출을 위해서는 서구만 아니라 아시아가 만들었던 아시아 담론과 지역주의의 계보를 충실하게 탐색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전반부를 할애하여 서구가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분석하고, 프랑스와 미국이 아

시아를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를 탐색한 역사를 파헤치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것은 서구의 시선과 연구만이 아니다. 아시아가 아시아를 바라보던 시선, 아시아가 수행한 아시아 지역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지만,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발신된 아시아담론이 20세기 중반이 되어 침략의 논리로 변질되었던 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제국의 학지(學知)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아시아 연구 기관이 만들어진 바가 있다.

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특히 대중들 사이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연구 거리다. 일례로 1970년대 들어 반주변부로 올라서기 시작한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아시아'를 호출한 바 있다. '아시아의 OO'이라 불리던 스포츠 스타들, 아시아 최대를 자랑하는 건축물의 등장 등은 주변에서 반주변부로 올라선 한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참조점으로 아시아가 호출된 사례다. 요컨대, 탈식민주의적 아시아 담론의 창출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아시아가 바라본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성 형성의 프로세스가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보여 주듯이 아시아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지역격 내지 지역성의 형성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ASEAN이라는 단단한 플랫폼을 지닌 동남아시아나, 이슬람, 실크로드,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같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자원을 지닌 중앙아시아가 지역성 형성의 도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 지역성에 관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그보다 몇 걸음 뒤쳐져 있고, 종교와 체제, 지정학이 교차하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아시아나 서아시아는 더욱더 지역성의 형성이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역격과 지역성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 프로세스는 무엇일까? 나아가, 메가아시아가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 프레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생의 틀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으로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아시아에서 지역격과 지역성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지역격과 지역성의 형성 과정

을 ASEAN과 같은 중앙정부들 사이의 협의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해진 오늘날, 아시아를 넘나드는 사람들, 물건들, 콘텐츠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주, 유학, 여행 같은 형태로 아시아를 오가는 사람들, 지하자원에서부터 반도체,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를 넘나드는 수많은 물건들, 영화에서부터 음악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 우리는 또한 지역역과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메가아시아가 공생을 위한 개념적 틀거리가 되고자 한다면 메가아시아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도 있다. COVID19 팬데믹과 기후 변화와 같이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역적 협력이라는 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 시민사회, 나아가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젠더, 인종, 노동 등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을 안보와 평화,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넘어 아시아 대중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젠더, 노동, 민주주의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도 접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 노동, 민주주의 등의 영역에서 아시아에 대한 서구 사회의 비판이 '제국주의'로도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의 비판은 아시아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보다 유효한 수단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선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내지 아시아 지역 지식인들의 공감대에 기초한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초국적인 규제의 망을 만드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메가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제안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대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공동체의 형성이 정부 행위자를 규제하는 성과로까지 나아갔듯이,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투고일: 2024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8일